

3분이면 갈 거리, 휠체어 이동 큰 불편 건물 5곳 돌고돌아 10분만에 겨우 도착

‘장애인 모니터링단’ 전남대 편의시설 점검 동행 취재해 보니

장애인 전용 출입구엔 턱...주차장 폭도 규정 미달 비좁은 도서관 통과대에 건물밖 돌아 화장실 출입

최근 전남대에서 만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4명은 전남대 곳곳을 살피며 장애인 이동 접근성 등을 점검하느라 분주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점검 리스트를 들고 전남대 곳곳을 돌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이동성 확보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모니터링단은 뇌병변장애인 3명, 비장애인 1명 등 4명으로 구성된 2시간 동안 전남대 편의시설을 점검했다. 불편한 이동성 문제로 건물 1곳당 점검 시간도 오래 걸렸다.

모니터링단의 중앙도서관까지의 접근성도 문제가 됐다. 비장애인의 경우 대학 본관에서 3분이면 도착할 거리(200m)지만 장애인들은 경사로 등 장애인 전용 출입통로가 없어 멀리 우회해야 했다. 건물 5곳을 돌아 도서관 뒤 오르막길을 따라 가야만 도착할 수 있었다. 걸린 시간도 비장애인의 3배(10분·740m)나 됐다.

그나마 이 과정에서 4~5cm의 경계턱 때문에 주위의 도움을 받아 이동해야 했다. 장애인 전용 출입구마저도 3.5cm의 높은 경계턱으로 이동하는 데 제약을 받았다. 10분 이동하는데 옷은 땀으로 뻘뻘이 됐다.

출입문 앞에 마련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도 2.6m로 규정(3.3m)에 미치지 못했다.

도서관 내부도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전통휠체어가 들어가기에는 자동 통과대

폭(60cm)이 좁아 통과하지 못했고 화장실을 가려면 건물밖으로 나가 다른 출입문을 이용해야 했다. 5층 규모의 도서관 중 장애인용 화장실은 1층 한 곳 뿐이었다.

화재 발생 시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은 도서관 3층, 장애인 열람실에만 설치돼 있었다.

비장애인 모니터링단원 정현숙(여·43)씨는 “조선대의 경우 학생회관임에도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는가 하면, 도서관 정문도 무거운 여담이문이 설치됐고 교정이 안돼 장애인 이동 과정에서 다칠 위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경환(36·뇌병변장애 1급)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편의법 보다 건축법 개정 내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이 처한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도, 건축 규정은 따라가지 못하고 최소한의 권리만 보장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게 모니터링에 참여한 박씨 주장이다.

지체장애 14명·뇌병변장애 11명·비장애인 5명 등 32명으로 구성된 광주권 모니터링단은 오는 7월까지 전남대를 비롯, 광주, 전남·북 18개 대학과 36개 관공속박시설, 18개 장애인 이용시설 등을 둘러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한편, 모니터링단은 전남대 도서관 장애인 열람실 내 상담 공간, 확대 독서기와 침대, 낮낮이 조절용 휠체어 설치 등의 경우 장애인 배려 정책으로 평가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이 지난 13일 오전 광주시 북구 전남대 도서관을 찾아 통행로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경보·피난설비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김진수기자 jeans@

목포서 선박 화재 감식 중 시신 발견

화재 이틀만에 확인 논란

불에 탄 선박을 감식하는 과정에서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화재 발생 이틀 만에 시신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화재 조사의 적절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19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께 화재감식 중이던 46t급 어선 3008만선호 기관실에서 시신을 알 수 없는 시신이 발견됐다.

해경은 화재 이후 ‘지난 3월14일부터 장기 계류하고 있는 상태로, 사람은 없고 개 2마리만 배에 있다’는 선주 진술로 미뤄 선박 내부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 감식을 위해 무연의 한 조선소로 선박을 예인해 조사에 들어갔다.

해경은 다음날 화재 감식을 위해 선박을 육지로 들어올리려다가 실패, 19일 새벽에야 배를 육지 위로 들어올려 감식

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화재 발생 이틀 뒤에야 시신을 발견한 것과 관련, “화재 진화를 위해 뿌린 물이 선박 내부에 가득 차 배가 가라앉기 직전이었다”며 “선박 구조물이 FRP(플라스틱류)로 강한 불에 모두 녹아내려 곧바로 해체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수습된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DNA검사 등 정밀 부검에 들어갈 예정으로, 해경은 화재원인 및 사망자의 시원 파악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이 배는 지난 17일 새벽 3시25분께 목포시 북항 3부두에 계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으며, 출동한 해경과 소방당국에 의해 4시간 만에 진화된 바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소방관 216명 초과근무 수당 일부 승소

법원 “전남도, 45억원 지급하라” 판결

64억 이미 지급...차액 처리 관심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강희)는 전·현직 소방공무원 216명이 전남도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전남도가 지급해야 할 액수는 지급되지 않은 초과근무 수당과 지연손해금(이자)을 합쳐 원고 1인당 300여만~3400여만원씩 총 45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치단체는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줘야 한다”면서 “피고들은 정당한 초과근무 수당 중 이미 지급한 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소방공무원들은 자치단체들이 편성한 예산 범위에서 계급 등을 토대로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을 정해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

하지 미지급분을 따라져 지난 2012년 소송을 냈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당시 432명이 낸 소송에서 1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광주지법은 “민사가 아닌 행정부의 소관”이라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 행정부로 이송했다.

결국 같은 사안을 놓고 두 번의 1심 재판이 진행된 셈이다. ‘파기 이송심’ 형태로 1심 재판이 다시 진행되면서 기존 승소판결로 미지급된 수당을 받은 소방공무원들이 금액 일부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남도는 기존 1심 판결에 따라 216명에 대해 64억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다. 이번 1심 판결에서는 전남도가 45억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당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도 패소 확정 시 연 20%에 이르는 지연 손해금(이자)을 줄이려고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했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구석진 곳에 장애인 관람석...휠체어 바퀴 빠지는 배수구

장애인 배려없는 문화전당

가파른 경사로 이동 힘들고

바닥 점자블록도 생색내기용

광주 장애인단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미흡한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광주지체장애인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접근권 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 광주시 북구 광주시회 복지회관 대강당에서 회의를 갖고 장애인

들의 아시아문화전당 접근권 확보 문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들은 최근 광주시의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편의시설 사용자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한 해결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역 지체장애인 등 43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접근로 ▲안전시설 ▲관람석 ▲편의시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쉽게 이용하는 데 열악한 장소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전당 내 실외 배수구의 경우 간격(3cm)이 넓어 휠체어 바퀴가 쉽게 빠지는 위험이 노출됐고 지하 주차장에서 건물 승강기로 이어지는 경사로도 휠체어로 이동하기에는 힘들 정도로 가파른 것으로 조사됐다.

탈출 수단이 가파른 경사로 외에 비좁은 승강기가 전부는라 점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고려한 장애인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바닥에 설치하는 점자블록도 주 출입문에만 설치됐고 동선을 유도하는 선형블록이 없어 ‘생색내기용’

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축지도(觸地圖)도 표준점자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가 공연장 내 좌석의 위치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토록 관련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석진 곳에 설치하는 등 국내 최신 문화 전문 시설에 걸맞지 않은 ‘장애인 배려 문화’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현섭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최신 문화 시설임에도, 일부 시설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등 지난 1980년대 눈높이에 머무르는 등 이동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술집에...생면부지 남성에 시비 걸고 뽀뽀한 40대남



○...술집에 음식점에서 처음 만난 생면부지 남성에 시비를 걸고 ‘뽀뽀’까지 한 40대 남성이 경찰서엔

○...19일 광주광안경찰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 16일 밤 10시10분께 광안구 장대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B(26)씨의 입술에 입맞춘 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두

른 혐의.

○...B씨는 이날 음식점에서 ‘이름이 뭐냐’며 시비를 걸은 A씨를 피해 밖으로 나갔다가 봉변을 당했는데, 기습 ‘뽀뽀’를 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 때문에 밟도 못 밟고 나가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사과의 의미로 입맞춤을 한 것이 다른 의도는 없다”며 횡설수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 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 5만원 이상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